

CJ,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 지원 공정위, 65억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TRS 통해 부실 계열사 자본 보증
공정위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제재”
CJ “법적 대응 검토” TRS 적법 주장



CJ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계열사였던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물라인(현 CJ4D플렉스)의 자본 조달을 사실상 보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계열사는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CJ건설과 시물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계약처럼 포장됐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채의 상환위험을 CJ와 CGV가 떠안는 구조였다.

TR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선 CJ 측이 이익 실현 의사가 없고 전

환권 행사도 봉쇄돼 있었던 만큼 ‘신용보강 계약’이라는 내부 표현 그대로, 사실상 보증 행위로 작동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전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두 부실 계열사는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650억원(CJ건설 500억원, 시물라인 150억원)을 조달했고, 금리 절감 효과도 각각 31억원, 21억원에 달했다. CJ건설은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물라인도 4D 영화관 장비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에 대한 기회의 제

한으로 이어진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등 외형상 투자로 위장된 계열사 지원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시기 체결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500억원) 관련 TRS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료하고 제재를 면제했다.

CJ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적극 해명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푸드+ 수출지원 위해 민관협력 모델 발굴

농식품부, 2028년부터 사업화 착수

정부가 ‘K푸드+’ (농식품에 스마트팜 등의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를 국제 농업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모델로 키운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K푸드+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분야 개발 협력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13개 수출기업 및 유관 기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단체는 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 정부가 ODA를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K푸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저소득 대학생 160명에 장학금 3.2억 지원

가스공사, 1인당 200만원씩 지급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LnG(Leading & Growi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LnG 장학 사업은 ‘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청년 장학금’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스공사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선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전국 대학 재학생(110명),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25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25명) 등으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며 “LnG 장학 사업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술·혁신 기반 농식품창업 생태계 조성”

농식품부,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투자유치·판로 확대 등 기회 제공
산업 창업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정부가 기술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개최사를 통해 “AFPRO 2025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기술과 창업이 맞닿은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다가오는 2025 APEC 제10차 식량안보 장관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참관한 뒤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제언 등을 수렴했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다. 농식품부가 주최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한다. 기술 전시를 비롯해 상담회, 토크콘서트, IR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한·일 7박 ‘크루즈 체험단’ 모집

무작위 추첨 30팀 선정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30

팀(60명)의 체험단은 오는 9월5일 부산항에서 11만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한다.

국내 속초와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뒤 9월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8일 일정

(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 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 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한다. 체험단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RE100 산단’ 조성… 연내 특별법 제정

산업부, 범부처 TF 출범, 첫 회의 개최

정부가 연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조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